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5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9. .

제 출 자 : 성동구청장

1. 개정이유

최근 이상기후에 적극적 대처를 위해 자연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최근 이상기후에 적극적 대처를 위하여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(안 제2조)

나.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 반영

- 1)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 규정 신설(안 제67조)
- 2)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(안 제67조의2)
- 3) 구상에 따른 구청장의 책임 조항 신설(안 제67조의3)
- 4) 생활안전지원의 실시 구체화(안 제71조제2항)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(안 제69조 ~ 안 제73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8. 8. 14. ~ 9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한다.

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난피해자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, “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 및 그 밖의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지원”을 “다음 각 호의 지원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(이하 “생활안정지원”이라 한다)
2.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(이하 “간접지원”이라 한다)
3.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(이하 “피해수습지원”이라 한다)
4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
5. 그 밖에 구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
제67조제2항 중 “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2항”을 “피해상황, 재정여건,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2항”으로, “고시”를 “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”로, “산정기준, 피해상황,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”을 “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.

1. 장례비 :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2. 치료비 :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·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7조의2(지원금액 등의 구상)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(이하 “원인제공자”라 한다)에게 제6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.

제67조의3(구상에 따른 책임)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67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(이하 “재난피해자”라 한다)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재난피해자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인하여 주민”을 “주민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인하여 피해”를 “피해”로, “재난피해자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피해의”를 “피해에 대한”으로 한다.

제70조 중 “재난피해자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, “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”를 “원인제공자”로 한다.

제71조제1항 중 “재난피해자로부터”를 “피해주민으로부터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71조제3항(중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난피해자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재난피해자가”를 “피해주민이”로, “재난피해자의”를 “피해주민의”로 한다.

제7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71조제5항”을 “제71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73조 본문 중 “생활안정지원”을 “제71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”으로, “자금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”를 “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

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”로, “등의”를 “등을 말한다)의”로 하고, 같은 조 단서 중 “재난피해자”를 “피해주민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) 제67조제1항부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69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같은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<후단 신설>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--. <u>이 경우 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에 미세먼지를 포함한다.</u>
제67조(지원기준)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<u>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 및 그 밖의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지원</u> 할 수 있다. <u><신 설></u>	제67조(지원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<u>피해주민</u>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지원을</u> -----. 1. <u>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(이하 “생활안정지원”이라 한다)</u> 2. <u>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</u>
<u><신 설></u>	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, 피해상황,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.

<신 설>

정」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
간접지원(이하 “간접지원”이라 한다)

3.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(이하 “피해수습지원”이라 한다)

4.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

5. 그 밖에 구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

② -----
----- 피해상황, 재정여건,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제2항-----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--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

-----.

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.

1. 장례비 :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

	<p><u>비용</u></p> <p><u>2. 치료비 :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장례비·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67조의2(지원금액 등의 구상)</u></p> <p><u>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(이하 “원인제공자”라 한다)에게 제6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67조의3(구상에 따른 책임) 원</u></p> <p><u>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67조의 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,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69조(지원 결정) ① 구청장은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</p>	<p>제69조(지원 결정) ① ----- -----</p>
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(이하 “재난피해자”라 한다)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.

1.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 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(資力)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
2.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구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

3.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·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

- 피해주민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 피해주민-----

2. ----- 주민-----

3. ----- 피해-----
----- 피
해주민-----

② -----

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
서울특별시시장에게 지원을 요청
할 수 있다.

제70조(중복지원 금지) 재난피해
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
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
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사회재난
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
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
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
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
아니한다.

제71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
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
(이하 “생활안정지원 등”이라
한다) 은 재난피해자로부터 신
고를 받아 실시한다.

<신 설>

②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재난피
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하지

피해에 대한 -----

-----.

제70조(중복지원 금지) 피해주민-

----- 원인제공
자-----

-----.

제71조(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)
① -----

----- 피해주민으로부터-----
-----.

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
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3조제1
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
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
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
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----- 피해주
민이-----

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1. · 2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재난피해자가 사망·실종·부상·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·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제72조(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) 구청장은 제71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.

1. ~ 8. (생략)

제73조(지급방법)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-----구청장은 피해주민이 -----

----- 피해주민의 -----

-----.

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제72조(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) ----- 제71조제6항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제73조(지급방법) 제71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-----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 등(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

<p>회사 등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<u>재난피해자의</u>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.</p>	<p>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-- <u>등을 말한다</u>)의 --. ----- ----- ----- <u>피해주민</u>-- ----- -----.</p>
--	--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
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사회재난 피해주민 장례비, 치료비 지원 비용 발생(안 제67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

3. 미첨부 사유

- 사회재난 피해자의 장례비, 치료비 지원을 위한 일부 비용 발생이 예상되나, 그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

4. 작성자

- 성동구 안전관리과 행정7급 민원동 (연락처 2286-6273)

< 관 계 법 규 >

□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조(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) ① 국가는 법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.

1. 생활안정지원: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(이하 "재난피해자"라 한다)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

가.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

나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

1)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·실종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한 경우

2) 농업·어업·임업 및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

다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주거비 지원

1)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

2) 사회재난으로 피해가 예상되어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가 불가능하게 된 사람

3) 재난 수습을 위하여 주된 거주지에서 이주하게 된 사람

라. 주택이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 또는 주된 거주지에서 생활할

수 없게 된 사람에 대한 구호

마. 고등학생의 수업료 면제

2. 간접지원: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
목의 지원

가. 농업인·어업인·임업인 및 염생산업인에 대한 자금 융자

나. 농업·어업·임업 및 염생산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
의 감면

다.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

라. 주택 복구자금의 융자

마. 국세·지방세, 건강보험료·연금보험료, 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
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

3. 피해수습지원: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
의 사업에 대한 지원

가. 공공시설의 복구

나. 재난피해자의 수색 및 구조

다. 오염물 및 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

라. 합동분향소 설치·운영 등의 추모사업

제4조(생활안정지원과 피해수습지원 비용의 산정 등) ① 생활안정지
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필요한 국고와 지방비는 해당 사업에 드는 실
제 비용과 피해금액 등을 기초로 별표의 부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.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편성기준과 관계 중앙행

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 등을 기초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을 확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5.29.>

1. "금융회사등"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
나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
다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
라.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
마.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
바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
사.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
아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

자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

차.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
카.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
타.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
파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
하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0. 25.
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: 2018. 9. 21. /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8. 9. 27.

다. 상정일자: 2018. 10. 24.

(제241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안전건설교통국장

나. 제안이유

최근 이상기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연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최근 이상기후에 적극적 대처를 위하여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(안 제2조)

나.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 반영

- 1)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, 치료비 지원 규정 신설(안 제67조)
 - 2)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 청구 신설(안 제67조의2)
 - 3) 구상에 따른 구청장의 책임 조항 신설(안 제67조의3)
 - 4) 생활안전지원의 실시 구체화(안 제71조제2항)
- 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.
(안 제69조 ~ 안 제73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8. 8. 14. ~ 9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또는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참조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 또는 강화규제 없음.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.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이상기후에 적극적 대처를 위해 자연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

- 최근 이상기후에 적극적 대처를 위하여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를 포함하였고,
 - 행안부 「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」을 반영하여, 사회재난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·치료비 지원,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 청구, 구상에 따른 구청장의 책임 등을 신설하고, 생활안전지원의 실시절차를 구체화 하였으며
 -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.
-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, 실제로 국내 미세먼지 농도와 공기의 질은 전 세계 최하위권,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선진국 주요 도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
- 상위법인 「재난 및 안전기본법」이 2018년 9월 18일 일부개정되어 한파, 폭염 등은 자연재난으로 규정하였지만 미세먼지는 재난으로 명시하지 않아 미세먼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본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합리적 발의라고 할 것입니다.
-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, 본 개정안은 조례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,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춰 정비하는 등 전체적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.
- 다만,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 절차 및 불복절차 등

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.

6. 질의 및 답변요지: 회의록 참조.

7. 토론요지: 없음.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